나주

이주여성 친정나들이 두배 확대…한전 연계 자녀 외국어 교육 다 문화가족 행복지수 높인다



나주 710세대 3천여명 거주 도내 5번째 이주여성 정착·자녀 글로벌 리더 육성 시, 동반자적 성장 정책 대폭 강화키로

나주시가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정착을 돕고 행복제감지수를 높이기 위한 '동반자적 성장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친정나들이 사업을 전년대비 두배로 확대하는 등 다문화 가 족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또 두 나라를 가슴에 품은 다문화 자녀들이 미래에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 이전 기관과 연계한 지원 사업도 진행중이다.

이는 갈수록 늘어나는 다문화가정과의 동반자적 성장이 필요 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1월말 현재 나주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은 710세대로 가족까지 포함하면 3천여명에 이른다. 전남 도내 22개 시군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은 수다. 출신국가로는 베트남이 209명으로가장 많고 중국 187명, 필리핀 120명, 일본 77명, 캄보디아 46명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나주시는 그동안 결혼이주여성의 자존감 향상과 자녀성장, 자기 정체성 확립 등을 통해 건강한 가정을 꾸릴 수 있도록 한국어 교육, 상담, 통·번역서비스, 자녀언어발달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부터 관련 시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2007년 개설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생애주기별, 문제유형별로 가족갈등문제 해결을 위한 가족관계 지원,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사업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나주시는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한 '다문화가족 친정나들이'사 업이 자녀들에게 엄마국가의 역사를 실제로 가르침으로써 어머 니의 자존감 회복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은 만큼 관련 사업 규모를 두배 이상 늘릴 방침이다.

나주시는 지난해 태국 출신 6가정 20명에게 항공권과 숙박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나주시는 또 엄마나라 말(중국, 베트남)배우기 학습교실을 운영 하는 등 다문화 자녀를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는 프로그램도 강화하 고 있다. 엄마나라의 말 배우기는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주2회(주중반, 주말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문화 자녀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 국전력공사와 연계해 학습 멘토로 영어 학습도 병행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같은 자녀교육과 함께 결혼이민자 학부모의 한국



2015년 결혼이주여성 친정나들이 사업.



다문화가정 엄마·아빠 나랏말 경연대회

어 능력 향상과 학력취득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베트남 출신 후인녹니엔씨 등 9명이 검정고시로 초 등학교 졸업학력을 취득하기도 했다.

하양진 나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은 "다문화가족들의 언어와 문화 부문에서 강점을 잘 살려내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수 있도록 하겠다"며 "단순한 지원이 아닌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한 단체급식조리사양성과정, 나주시의 관광해설사 양성과정 교육 등 직업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승 나주시 사회복지과장은 "시민의 다문화 수용성을 높여 동반자적 성장을 유도하는 한편 친정나들이사업 확대, 자녀들의 글로벌 성장, 취업교육을 확대함으로써 다문화 가정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공무원 부패, 언제 어디서나 익명 신고 가능

나주시, 청렴문화 정착 위해

제보자 보호 시스템 도입

나주시가 청렴 공직문화 정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무원 부패행위 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새로 도입된 익명신고 시스템은 기존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 신고자의 PC나 스마트폰의 IP정보가 남지 않는 보안기술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해 제보자의 익명성이 철저히 보장된다.

또 신고를 접수하는 감사부서도 추적

이 불가능해 신고자의 신분공개 우려 부분을 개선했다는 게 나주시의 설명이다.

신고내용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 위, 부당이득 수수 행위, 정보·보안 관련 위반행위, 부당한 업무 강요, 부적절한 금전관계, 건전한 조직문화 저해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및 기타비윤리적 행위 등이다.

시는 관련 증거자료가 있거나 객관적 으로 인정되는 공직내부 비리와 부조리 제보사항은 적극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시민불편사항과 악의적인 신 고사항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처리가 필 요한 시민불편사항은 관련 부서에 통보 해 처리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익명성이 보장된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공무원 부정부 패 사전 예방과 비위행위 감시기능이 강 화되어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패신고는 나주시청 홈페이지(www. naju.go.kr)나 시스템 운영사인 레드휘 슬(www.redwhistle.org)로 하면 된다. 스마트폰 이용시 QR코드 앱이나 레드휘 슬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실시간으로 감사부서에 전송된다.

/나주=손영철기자 ycson@

나주읍성 4대문 복원 10월 완료…북망문 마무리 박차

역사문화 관광사업 활기

천년 목사(牧使)골을 상징하는 나주 읍성의 4대문 복원사업이 오는 10월 북 망문 복원을 끝으로 모두 마무리될 예정 이어서 읍성권 역사문화 관광사업도 활 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나주읍성은 서울 도성(都城)과 같은 4 대문과 객사, 동헌 등을 고루 갖춘 전라 도의 대표적인 석성(石城)으로 둘레가 3.7㎞, 면적은 97만2600여㎡에 이른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의 역사 지 우기와 개발 등이 맞물리면서 터만 남긴 채 모두 훼손됐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80억원이 투입된 북망문 복원 및 주변정비공사가 지난 2012년 사적지 토지 및 지장물 매입 추진을 시작으로 1, 2차 학술발굴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완공된다.

전국 5대 읍성으로 꼽히는 나주읍성 은 4대문 복원사업으로 지난 1993년 남 고문 복, 2006년 동점문, 2011년 영금문 (서성문) 복원을 마쳤으며, 지난해부터 마지막 남은 북망문복원 공사를 진행중 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이 지난 15일 나주읍성 4대문 중 하나인 북망문 복원공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나주시는 4대문 복원과 함께 도심에 밀집돼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해 전통문 화 콘텐츠 개발과 체험 프로그램, 전통 문화 교육 등을 통한 도시재생의 선순환 거점화할 방침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지난 15일 북망문 복원공사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새 롭게 발견된 성벽 등은 '오랜 역사의 산 증인'으로 귀중한 유산인 만큼 잘 보존 해야 한다"며 "복원된 성문 주위가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민친화공 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발 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118억원에 이어 올해도 103억원을 확보하는 등 역사문 화도시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강인규시장 "주민과 대화서 나온 민원 320건 신속 처리"

강인규 나주시장이 올해 '주민과의 대 화'를 통해 총 320건의 민원사항을 접수 받고 신속한 처리를 약속했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지난 달 8일 금남동을 시작으로 25일 성북동 까지 20개 읍면동에서 실시했던 '주민 과의 대화'와 28일 '저녁시간 대화'에서 시민들로부터 총 320건의 민원사항을 접수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시민들의 민원내용에는 농로포장과

도로개설 등 건설사업이 1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업분야 34건, 교통 및 경제 활성화 분야 30건, 관광문화 분야 25건, 하천 및 상하수도 시설정비 25건, 경로당 보수 등 복지 분야 20건 등이었다.

강 시장은 "시민들이 주신 건의내용 들을 해당 부서별로 안배하고, 현지방문 을 통해 조사한 뒤 사업의 시급성과 불 편함이 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우선 순위에 따라 올 추경예산에 우 선적으로 반영하겠다"면서 "어려운 재 정여건이지만 시민 의견 모두를 소중히 생각하고 받들어 불편사항이 하루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나주시는 건의한 민원에 대해 면 밀한 현장 확인과 검토를 통해 이달 중 2016년 추진사업과 2016년 이후 중장기 추진사업, 추진불가 사업 등으로 분류해 건의자들에게 추진일정과 추진내용 및 불가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해 통보할 계 획이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



